

민주 '2톱', "韓 내란동조세력 되지 말아야" 압박

향후 전개될 '탄핵정국' 대비 포석이란 해석 나와 이재명 "尹, 절대군주 꿈 꾀...탄핵 반드시 해내야" 박찬대 "나라 팔아먹은 을사오적과 다를 바 없어"

정치권에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2톱'인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 대해 "내란 동조 세력이 되지 말아야 한다"며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국회 주변에선 향후 빠르게 전개될 '탄핵 정국'에 대비한 사전 포석이란 해석이 나왔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실질적인 왕정을 꿈꿨던 친위 쿠데타, 절대군주가 되려고 했던 것이 이번 사건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 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은) 모든 헌법 기관과 국가기관을 자기 손아귀에 넣고

왕으로서, 전제군주로서 전적인 권한을 행사하려 한 것"이라며 이같이 규정했다.

이 대표는 "그런 측면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무덤에서 살아난 친위쿠데타를 다시 무덤으로 돌려보내고, 부활하지 못하도록 봉인해야 하는 게 우리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도 "제가 한 대표에게 전화도 드리고 비서실장을 통해 대화도 요청했지만 아무 반응이 없다"며 "한 대표는 대담하게 본인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내란 범죄집단의 한편이 되고자 하더라도 그렇게 되지 않게 만드는 게 당 대표의 책임"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대다수가 그 흐름을 따라가는 불행을 시정할 수 없다면, 본인을 포함한 일부라도 국민과

역사를 따라가야 하지 않겠나"라며 "내란 동조세력이 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당론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반대 입장을 정한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이 죽든 말든, 나라가 망하든 말든 상관없다는 소시오패스적이고 망국적인 발상과 태도"라며

"쓰레기 정당, 국민의 짐이 되지 말고 역사에 죄를 짓지 마시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구한말 자신의 안위를 위해 나라를 팔아먹었던 을사오적과 다를 것이 뭐가 있나"라며 "내란의 우두머리를 지키기 위해 내란 공범을 자처하면 역사의 심판을 결코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한동훈 대표가 인정했듯이 이번 비상계엄은 명백한 위헌, 위법 행위"라며 "국민의힘의 탄핵 반대 당론은 위헌, 위법한 내란에 동조하겠다는 의미거나 자신들이 내란의 공범이라는 실토"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선 "비상계엄을 경고성이라고 했다. 다음에는 국민을 상대로 전쟁이라도 불사하겠다는 말"이라며 "이런 위험천만한 인식을 가진 윤석열이 대통령직에 있는 것 자체가 국가적 위기"라고 주장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이 위기를 극복할 해법은 단 하나다. 위기를 자초한 원인인 윤석열이 물러나는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수기자

'비상계엄 선포'尹 탄핵 찬성 73.6%

TK서도 66.2%...내란죄 해당 69.5%

국민 10명 중 7명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504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 오차 ±4.4%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73.6%로 나타났다.

반대는 24.0%였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4%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에서 찬성이 79.3%로 가장 높았고, 인천·경기 77.3%, 대전·충청·세종 74.0%, 부산·울산·경남 72.9%였다. 서울은 68.9%, 보수의 심장지로 불리는 대구·경북(TK)에서도 탄핵 찬성은 66.2%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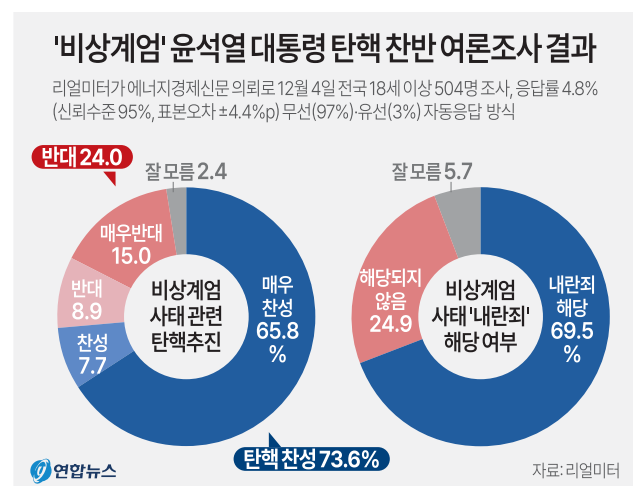
연령별로는 만 18~29세 (86.8%)와 40대 (85.3%)에서 탄핵 찬성 비율이 높았고, 50대 76.4%, 30대 72.3%, 60대 62.1%, 70세 이상 56.8% 순이었다.

이념 성향에서는 정치적 이념을 진보로 밝힌 응답자 안에서는 94.6%가 탄핵에 찬성했고, 중도층은 71.8%, 보수층은 50.4%가 찬성 의사를 밝혔다.

아권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는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조사에 응한 국민 중 69.5%는 이번 사태가 내란죄에 성립한다고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4.9%였다.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응답은 광주·전라에서 78.2%로 가장



높았고, 인천·경기 73.5%, 대구·경북 70.5%, 대전·세종·충청 64.4%, 부산·울산·경남 64.3%, 서울 62.7%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만 18~29세와 40대 (각 85.1%)에서 내란죄 성립 의견이 높았고, 50대 73.2%, 30대 64.7%, 60대 56.9%, 70세 이상 48.8% 등이었다.

이념 성향에서는 진보층은 93.5%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봤고, 중도층에서는 65.4%가 내란죄라고 봤다. 보수층에서는 내란죄라는 응답 (45.2%)과 해당하지 않는다는 응답 (49.9%)이 팽팽히 맞섰다.

이번 조사는 무선 (97%)·유선 (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4.8%다.

/연합뉴스

"전두환 확실한 처벌 없어 역사 되풀이"

姜시장-오월 단체 간담회...尹 퇴진 단합' 약속

광주시와 오월 단체·기관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힘을 모을 것을 약속했다.

광주시와 오월 공범 3단체 (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 오월어머니집, 5·18기념재단은 5일 오전 광주 서구 5·18 기념문화센터에서 비상계엄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비

전남시장·군수協 "尹 즉각 사퇴"

박홍률 목포시장만 성명에 이름 안올려

전남시장·군수협의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시장·군수협의회는 5일 "지난 3일 윤 대통령은 갑작스런 비상 계엄을 발표해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했다"며 "명백한 위헌이자 무효이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소위 사태를 일으

된 마음으로 함께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양재혁 유족회장은 "광주는 불의에 저항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곳"이라며 "계엄 주동자들을 끝까지 처벌하는데 광주시와 시민단체, 5·18 단체 모두가 합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남식 공로자회장은 "비상계엄 주동자 처벌에 광주시, 시민사회단체, 오월단체 모두 합심하자"고 주문했다. 조규연 부상자회장은 "윤 대통령에 대해 합당한 벌이 내려져야 한다"며 "7일 광화문 집회에 5·18 유공자들의 뜻을 더 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성학기자

평에서 쿠데타가 있어서는 안되며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후의 심판을 위해 힘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 성명에 22개 시·군 중 유일하게 이름을 올리지 않은 박홍률 목포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선출직 공무원 신분으로서 정치적 엄중 중립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국가와 지역 발전을 위한 행정력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불참 이유를 설명했다.

/장승-노형록·목포=정해선기자

광주매일신문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 캠페인

알고당사다 개인형이동장치

- 무면허 운전**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범칙금 10만원
- 승차정원 초과**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 1명
전기자전거: 2명
범칙금 4만원
-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범칙금 2만원
- 음주운전**
운전면허 정지·취소
범칙금 10만원
- 어린이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과태료 10만원

한국도로교통공단 KOREAD
광주광역시·전라남도지부